

## 전남도 농민수당 지급대상·규모 '윤곽'

전국 최초 지급 해남군 준용...농가경영체 경영주에 지급  
연간 60만원 40%도비·60% 시군비...어민수당도 동일

전남도가 내년부터 전면시행하려는 농민수당의 대상과 지급규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가 될 조례안이 거의 마무리돼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9월 중 도의회 회기중 조례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쟁점이 되는 농민수당 대상과 지



시상식 연습하는 수영대회 시상요원들

시상요원들이 시상식 연습을 하고 있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11일 앞둔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황룡관에서

급규모는 전국 최초로 수당 지급을 시작한 해남군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경영체나 개별농민이나를 놓고 엇갈렸던 지급 대상은 해남군과 같이 농가경영체의 경영주로 가닥이 잡혔다. 2018년 기준 전남 도내 농가 경영체 등록인 농민인원은 21만 9000여명이다.

지급 규모는 해남군처럼 총 지급액을 60만원으로 하고 40%는 도비로, 60%는 시군비로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남군의 경우 상하반기로 나눠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60만원 중 24만원(40%)을 도비로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연간 12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화순군이나 함평군의 경우 도비는 각각 24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나머지 금액 96만원은 해당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전남도는 농민수당과 함께, 어민수당도 내년에 도입한다. 어민수당 역시 농민수당과 마찬가지로 어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농·어민수당 지급 경영체 경영주는 24만 2000여명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칭 전남형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 마지막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지급규모와 대상은 전국 최초로 지급이 시작된 해남군을 준용했으며 마지막 시군과의 협의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전남 귀농·귀어·귀촌 '3관왕'...전국 감소 속 모두 증가 '유일'

인구 전담 부서 신설·대도시 설명회 등 한 몫

지난해 전남도내로 유입된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18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남 귀농인은 2만 2677명, 귀어인은 3207명, 귀촌인은 2만 8562명, 3만 7349명이다.

전국 귀농·귀촌 가구는 전년보다 6447가구, 가구원 수는 2만 6561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인 반면 전남은 귀농가 101가구(5.2%), 귀어가 37가구(13%), 귀촌가 3897가구(1.4%)가 늘었다.

전국적으로 귀농가구가 늘어난 곳은 전남과 세종 2곳 뿐이고 귀어가구가 늘어난 곳은 전남과 울산, 강원, 충북, 경북, 제주이며, 귀촌가

구가 늘어난 곳은 전남과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이다. 세 분야 모두 증가한 것은 전남도가 유일하다.

전남지역 귀농·귀촌가구는 연령별로 30대 이하가 1만 1946가구로, 전체의 38.8%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 층이 청정지역 전남에서 친환경농업 등 전남 농업의 경쟁력을 보고 귀농·귀촌을 많이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가 지난해 7월 민선7기 이후 인구감소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인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 예비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 '도시민 현장체험활동'을 펼쳐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도 한몫했다.

유현호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귀농·귀촌하기 가장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시군 관계자·귀농귀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전남으로 찾아오는 귀농·귀촌인이 전남 농촌과 농업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1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에 복한 선수단의 참가를 요청하고 있다.

## "북한 참가 믿고 대회 준비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 김정은 위원장에 수영대회 참가 요청

이용섭 광주시장이 남·북·미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북한측에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참가를 다시 요청했다.

이 시장은 1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관문점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다시 텄다"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의 결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시장은 "하루도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만남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환호했다"며 "이번 세계적 만남을 계기로 북측의 광주수영대회 참가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다시 키우고 있다"고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원장이자 주최도시의 시장으로서 김정은 위원장께 광주수영대회 참가를 간절히 그리고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관문점에서 시작된 대화의 물꼬가 한반도 전역을 타고 내려와 7월12일 광주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과 북이 하나돼 평

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수영대회로 개최하고 싶다"며 "북측이 수영대회 참가를 통해 체육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주기 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시민들에게는 지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측의 선수단과 응원단을 위해 개막식 600여 석을 비워두었지만 함께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아직도 짙게 남아있다"며 "남과 북은 반드시 만나야 한다. 이번 수영대회만큼은 꼭 북측이 함께 해주기를 150만 광주시민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이 국제경기들에 공동 진출해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광주에서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우리는 북측 선수단이 참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정성을 다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또 하나의 역사적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대회 참가를 요청했다.

서은홍 기자

##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시적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